



송용팔 | 넥시소프트 회장/충북대 외대교수

## 다시 보는 정보강국론

“산업화에는 뒤졌으나 정보화는 앞서 나가자.”

이 말에는 오래 전에 통신정책국을 발족시키면서 정보화 입국만이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있다는 국가적 염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절실한 각오들이 함축돼 있었다.

그로부터 23년이 흐른 오늘날 정보통신은 선진국이 부러워하고 벤치마킹 할 정도로 그야말로 정보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비롯하여 국가정보화지수, ITU의 디지털접근지수, IDC의 정보사회지수 등 각종 국내외의 평가에서 우리의 정보통신 인프라부문은 단연 상위그룹에 랭크 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정보화지수는 종합부문이 3위, 인터넷부문은 미국, 일본 등을 앞지르는 최상위 1위를 기록하였다.

어떻게 이처럼 단시일내 정보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관련 보고서는 ‘정보화와 IT산업 및 통신 인프라의 선순환 구조를 원활하게 육성 발전시킨 것’을 성공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이들간의 매개자로서 적극적인 경쟁정책과 정보화촉진기금의 역할이 뒷받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면서, 그 시절의 성공담을 여기에 덧붙인다면, 한마디로 통신문제를 ‘그들만의 리그’ 문제에서 국가적 아젠다 혹은 정책의제 설정에 성공함으로써 아주 적절한 시기에 선순환 구조의 기반확립이 가능케 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이전까지 통신문제를 독립부처에서 다루기는

하였지만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알아서 하는’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사업과 정책이 혼재된 상태에서 수행하다 보니 D.이스트인이 말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이라는 정책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한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1982년부터 사업체제를 공사화 이관시

키고 통신정책만을 전담하는 통신정책국을 신설해서 통신문제에 관한 사회 각 부문의 요구를 결집하여 가치중립적인 국가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시기적으로 조

금만 늦었더라면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시기는 토플러나 다니엘 벨 등 주류 정보사회론자들의 미래사회에 대한 기술결정론적 낙관론이 열풍처럼 풍미하던 시기였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였다고 하겠다. 그로부터 불과 2년 후에 AT&T의 분할, BT와 NTT 민영화 등 통신에 불어 닥친 엄청난 개방·자유화의 삼각파도를 생각한다면 정책체제의 발족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였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통신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서 끄집어내는 데 큰 몫을 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통신수요’를 빼놓을 수 없다.

연간 100만~200만에 이르는 지속적인 전화 적체, 매번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려도 곧 다시 적체현상이 되는 가히 폭발적인 통신수요가 선행되었기에 정책이나 공급 측면의 문제들이 정당성을 갖는다.

이러한 한국적인 특수현상은 기존의 경제이론이나 수요공급법칙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기현상으로 기억되곤 했는데, 급기야 이런 폭발적인 수요급증현상을 ‘연쇄반응 효과’라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논리화하여 GNP와 지수 상관방식의 급격한 공급규모확대에 적극 활용하게 이른다. 이 연쇄반응효과는 21세기로 이어져 휴대폰 보급시대에 들어와 또다시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PC, 초고속 인터넷 등 신규매체가 등장할 때 마다 맹위를 떨쳐 신규공급 사업자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워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신문제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사회보

편적 의제로 인식하게 만든 데는 전자교환기의 등장을 빼 놓을 수가 없다. 전자교환기는 기존의 기계식과는 다른 공급방식과 그 이점 때문에 단위공급규모를 대형화 할 수 있어 대량공급체제를 가능케 하는 것 이외에 우리나라 컴퓨터산업 발전에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정보통신 인프라의 비약적 성장발전은 강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 역시 공존하게 마련이므로 앞으로 더욱 탄탄한 정보화입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정보인프라가 벌써 한계성장에 다다랐는가 하는 점인데 한계성장 문제는 앞으로의 전략설정에 매우 중요하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WEF평가에서는 취약 분야로서 우선전화 보급률이 꼽혔고, 국가정보화지수 평가에서는 PC·인터넷·초고속·이동전화 보급 등이 모두 세계최상위 보급률을 보이면서도 성장률면에서는 평가대상 50개국 평균성장률은 물론, 상위20개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3~4%의 낮은 한계성장률을 보였다. 다만 CATV만이 15%선의 가입자성장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다음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보인프라가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라섰음에도 다른 부문의 경쟁력은 그만큼 뒤따라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보기술은 디지털경제와 지식기반사회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P. 드러커를 비롯한 정보사회론자의 주장이다.

WEF 평가에서 약한 분야로 꼽히는 항목들은 최악수준인 노사관계(71위)를 제외하더라도 공공기관제도분야(42위), 지적재산권(36위), 전문경영능력(36위), 경영진효율성(51위) 등 국가와 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표들이 대부분 하위권이다. 또한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츠 마흐럽(Fritz Machlup)이나 마크 포랫(Marc U. Porat)이 주장하는 지식정보산업의 비중이 국내총생산이나 노동력구성에서 크게 진전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컴퓨터 이용효율이 미국, 일본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지적재산이나 지식정보의 창출능력에서 더욱 격차가 커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지식정보화는 정보인프라만가지고 안되며, 오히려 사회 문화적 요인이

나 국민의식 차원의 오프라인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다음은 정보인프라의 효과가 국민혜택으로 얼마만큼 돌아갔는가의 문제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컴퓨터 성능의 비약적 향상과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결합하여 웹 혁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컴퓨터성능은 무어의 법칙, 광통신네트워크는 맥가비의 확장법칙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향후 10년간 컴퓨터의 비용대비 성능효과는 100배 향상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통신요금수준은 OECD평균에 비하여 42.2~58.3%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ISDI 보고서는 지난 10년간(1991~2001년)의 GDP 통신지출 비중 변화를 국제비교 하였는데 20개국 평균이 1.2~3.4%인데 비하여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는 2.1~4.8%로서 미국 2.8%, 일본 2.7%보다 훨씬 통신비 지출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이를 도시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통계를 통해서 1993년부터 2004년까지의 소득증가 대 통신비 증가배수를 보면, 소득 2.08배 대 통신비 7.03배로서 약 3.5배 정도로 통신비 지출이 더 늘어났으며, 이 기간 중 통신비는 1만 9006원에서 13만 3689원으로 증가돼 점유비도 1.7%에서 5.7%로 늘어났다. 통신비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가구의 생활환경이 정보화로 진전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정보기술의 발전속도가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시점이야말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문제를 보완하여 새로운 정보강국론을 재정립해야 할 시기이다.

즉, 지금까지의 정보화 입국론이 정보인프라 건설에 전력을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보다 효율성과 전략성을 높여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각종 미디어간의 통합성 강화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방송과 통신과 인터넷의 얽히고 설켜 구조를 유지 인터넷페이스(UI)의 차원으로 통합해 나가야 한다. 하부구조인 단말기나 미디어기술은 통합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정작 최종 유저에게는 세분화 난립되어 제공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비쿼터스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궁극적으로 UI를 단순화, 통합화하는 길 뿐이기 때문이다. **K**